

방송기자연합회 전문 팩트체커 양성 과정 연수 후기



저널리즘의 길, 팩트체크 원칙의 ‘일상화’

허위정보는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그만큼 허위정보를 가려내기 위한 언론과 시민의 노력도 상당하다. 방송기자연합회에서는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시민이 많아져야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고, 기존 언론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전문 팩트체커 양성 과정을 신설 운영했다. 제1기 양성 과정에 참여한 한 언론인의 연수 후기를 소개한다.

글 조을선 (SBS 보도본부 기자)



방송기자연합회 전문 팩트체커 양성과정 1기 수료식.
<사진 출처: 방송기자연합회 제공>

“언론의 자유가 언론인 스스로의 무능과 무기력으로 인해 수호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사실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참다운 여론은 방향을 잃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엔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아 국민의 결속을 저해하고 있다. 언론은 국민들로부터 불신당하고 언론인들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긍지를 잃고 실의에 빠져 있다.”

1.
1973년 11월 20일
동아일보 기자들이 채택한
'언론자유수호 제2선언문'
송건호 등, 《한국 언론
바로 보기 100년》,
다섯수레, 351p

언론에 대한 불신 속 이른바 '가짜뉴스' 논란이 자주 불거지는 요즘, 이 글은 오늘날 언론인들의 현실과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그러나, 이 글은 2019년이 아니라 유신 시대인 1973년 11월 20일 밤, 동아일보 젊은 기자들이 작성한 선언문 일부분이다.¹⁾ 그날 밤 기자들의 외침은 46년의 긴 세월을 관통해 지금도 꺾전을 울리고 있다. 40년이 훌쩍 지나도록 언론 불신의 시대와 그로 인한 고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은 필자와 같은 언론인들에게 책임이 있다. 자격이 부족한 내가 원고 요청을 받고 긴 망설임 끝에 글을 쓰기로 한 것도 다시 처음부터 돌아보고 반성하고, 이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였다.

전·현직 언론인, 교사 등 20여 명 참여

SNS 등장과 정치적 양극화, 언론에 대한 불신이 한데 엉켜 가짜뉴스 문제가 심화되면서, 팩트체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부응해 방송기자연합회(회장 안형준)가 전문 팩트체커 1기 양성과정을 마련했다. 강의는 5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공식 강의만 18강에 걸쳐서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진행됐다. 강사진은 팩트체크 경력이 굵직한 현직 기자부터, 언론 분야 변호사, 언론학 교수, 저널리즘 연구소장 등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예비 팩트체커들의 이력도 인상적이었다. 한겨레와 MBC 등 주요 언론사에서 30년간 펜을 들었던 대기자를 비롯한 전현직 언론인과, 미디어 교사, 정치경제 해설 유튜버 등 20명 안팎이 참여했다. 강의는 크게 '가짜뉴스의 정의'와 '팩트체크 방법', '국내와 해외 팩트체크 사례'로 구성됐다. 강의 후엔 질의응답과 함께 조별로 열띤 토론과 발표가 이어졌다. 한 달 동안 팀별로 팩트체크 관련 주제로 프로젝트가 진행됐고, 수업 마지막 날 발표로 마무리됐다.

어디까지가 가짜뉴스인가?

특정 이슈에 대한 가짜뉴스 논란이 일면 가짜뉴스 정의에 대한 논란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짜뉴스에 대한 학계 및 정부의 정의와, 시민의 인식 사이에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언론 학계에서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취해 유포한 거짓 정보”로 정의한다. 대개 SNS나 유튜브상에 악의적으로 만들어 올린 허위정보들을 가리킨다. 정부는 가짜

뉴스라는 명칭 대신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엔 비언론인의 허위정보 외에도 언론인이 고의로 사실을 왜곡한 보도도 포함된다. 가짜뉴스에 대한 실제 정의와 별개로, 시민들은 언론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세웠다. SNU팩트체크 정은령 센터장이 소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소위 ‘지라시’나 뉴스 형식으로 조작된 콘텐츠만 가짜뉴스라고 보지 않았다. 언론의 오보나, 선정적 제목의 낚시성 기사, SNS 내용을 확인 없이 그대로 전재한 기사, 한쪽 입장만 혹은 전체 사건 중 일부분만 전달하는 편파적 기사도 가짜뉴스로 보는 이들이 80퍼센트를 웃돌았다.²⁾ 이용자를 위해 뉴스를 제작하는 언론으로서 간과할 수는 없는 대목이다.

가짜뉴스, 권력기관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가짜뉴스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권력기관의 규제와 처벌이 답일까. 정부는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여러 시도를 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은 유언비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고, 2017년 경찰청은 가짜뉴스 전담반을 만들었다. 2018년 이낙연 국무총리도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해, 법무부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밖이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가짜뉴스도 문제지만 이를 바로잡는다는 구실로 권력기관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민변 언론위원회 이강혁 위원장은 정권의 엄정 대처에 관한 여러 법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의견과 사실, 오보와 조작의 구별은 매우 어렵고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정권 당시 ‘미네르바 사건’처럼 자칫 권력자가 시민을 입막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요즘도 정치권에서 불리한 뉴스에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일을 쉽게 볼 수 있다. 가짜뉴스 문제가 더 심각한가, 자칫 침해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더 문제인가. 어디까지가 가짜뉴스이며, 판단은 누가하나. 딜레마 같은 난제에 예비팩트체커들의 토론도 답을 찾지 못한 채 쳇바퀴를 돌았다.

진짜 뉴스가 제 역할을 할 때 가짜뉴스 밀어내

여기서 팩트체커에 대한 필요성이 재확인됐다. 미디어오늘 이정환 대표는 “나쁜

메시지에 대한 해결책은 더 많은 옳은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이 편파적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비판해야 할 때 제대로 비판하지 않거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느라 어설피게 물러앉아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정환 대표는 “진짜 뉴스가 제 역할을 할 때 비로소 나쁜 뉴스를 밀어낼 수 있고, 가짜뉴스가 힘을 잃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 문제는 심판자가 아니라, 이용자와 참여자, 시민이 서로를 돕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령 센터장도 “허위정보를 막기 위해서는 20세기의 객관주의적 저널리즘 가치보다, 검증되고 책임 있는 진실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여년을 거슬러 이미 1996년에 미국기자협회는 ‘객관’이라는 윤리적 규정을 삭제하고, ‘진실 추구’를 언론의 제1사명으로 올려놓기도 했다.³⁾ 정은령 센터장은 균형을 강조해 각 발화자의 주장을 그대로 전하는 이른바 ‘he said, she said 저널리즘’은 오히려 허위정보를 공식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팩트체크는 화자의 뜻을 훼손하지 않고 정확하게 받아쓰기 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한 말 그 자체의 진실성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며 팩트체크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팩트체크 노하우…핵심 원칙은 '투명성'

이론만큼 중요한 건 실천일 터. 검증 방법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자 예비 팩트체커들은 귀를 더 쫓긋 세웠다. 먼저 간단한 허위조작정보 감별법으로 이정환 대표는 아래와 같이 질문을 던져볼 것을 제안했다. 이는 BBC 가이드라인이다.⁴⁾

1.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미디어인가?
2. 내가 생각한 그 뉴스 소스인가 아니면 (이를 모방한) 비슷한 곳인가?
3.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곳이 지도상에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곳인가?
4. 다른 미디어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는 이야기인가?
5. 이 주장에 대한 하나 이상의 증거가 있는가?
6. 이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가?

KBS 데이터저널리즘팀 김양순 데스크는 의심되는 사안이 있을 때,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검증해볼 것을 주문했다. 이는 미국의 팩트체크 기관 폴리팩트(Politifact)의 검증방법이다.⁵⁾ 그는 먼저 당사자에게 근거를 물을 때 검증을 위한 중

3. 최경영. 《뉴스는 어떻게 조작되는가?》, 바다출판사, 235p

4. BBC 가이드라인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37848350>

5. 폴리팩트 가이드라인
<https://www.politifact.com/truth-o-meter/article/2014/aug/20/7-steps-better-fact-checking/>

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1. 주장하는 이에게 증거를 묻는다.
2. 기존에 다른 팩트체커가 확인한 것이 있는지 찾아본다.
3. 인터넷에서 검색해 조사한다.
4. 포털에서 검색되지 않는 사이트, 딥웹(deep web)을 검색해 조사한다.
5. 다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을 찾아본다.
6. 서적을 조사한다.

지면상 다 소개할 수 없어 아쉽지만, 권혜진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초빙교수의 인터넷 고급 검색 수업과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수업에서도 팩트체크 검증 기법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팩트체크의 차별점은 기사 형식에 있었다.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구본권 소장은 대표적 원칙으로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용자에게 검증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하이퍼링크를 활용해 인용 자료의 출처를 보여 주고, 취재와 검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기사를 수정할 경우 공개적으로 기록을 남긴다. 단편적 사건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전체적 맥락을 충분히 설명한다. 내일신문 정재철 기자는 미국언론연구소(API) 체크리스트에 따라, 최소 두 개의 독립적이고 검증된 출처를 확보하고, 해당 발언이 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유를 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환 대표는 기사의 약점까지 드러낼 것을 주문했다.

한국 팩트체크 어디까지 왔나…시민도 팩트체크

최근 들어 언론의 팩트체크 기사가 부쩍 눈에 띈다. 국내 팩트체크의 현주소는 어떨까. 국내에서는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오마이뉴스가 ‘오마이팩트’라는 이름으로 팩트체크를 처음 시도했다. 이후 JTBC의 ‘팩트체크’, SBS의 ‘사실은’, KBS의 ‘팩트체크K’가 잇따라 등장했다. 언론사마다 한 코너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다. 협업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SNU팩트체크는 2017년 언론사와 대학, 포털이 손을 잡고 출범한 팩트체크 기관이다. 언론사는 사안을 팩트체크해 서울대가 개발한 플랫폼에 게시하고, 네이버는 이를 포털 뉴스홈에 유통한다. 정은령 센터장은 2019년 현재

팩트체크의 투명성 원칙 강조하는 구분권 한겨레 미래팀 선임기자.
 <사진 출처: 방송기자연합회 제공>



27개 주요 언론사가 참여해 공직자 발언의 사실 여부와, 회자되는 다양한 이야기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대선 기간에는 같은 이슈에 대해 언론사들이 교차 검증을 했다. 언론사들의 공동 검증을 위한 더욱 긴밀한 협업이 과제로 제시됐다.

시민이 참여하는 팩트체크 실험도 진행되고 있다. 팩트체크 언론사 ‘뉴스톱’에는 기자뿐 아니라 정치, 경제, 과학 등 전문가가 참여해 팩트를 검증한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팩트체크가 기자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이 함께하는 장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팩트체크하는 시민이 많아지면 허위정보를 더 촘촘히 막고 언론도 성장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방송기자연합회도 지난 7월 시민 팩트체크 양성 과정을 개최하고, 지난해부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팩트체킹 공모전을 열고 있다.

세계는 지금?...거짓말 정치인 면전에서 팩트체크하는 나라

가짜뉴스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고민이다. 팩트체크 매체는 전 세계 60개국, 188개에 달하는 상황이다.⁶⁾ 인상 깊었던 사례 중 하나는 이탈리아 공영방송 RAI였다. 정은령 센터장이 소개한 뉴스 영상 속에선 앵커가 정치인과 그의 지난 발언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었다. RAI는 자신들의 방송에서 거짓 주장을 한 정치인들을 스튜디오에 다시 불러낸 뒤, 허위정보를 검증하고 직접 당사자와 논쟁했다.

인터뷰 당시 사실 관계를 바로 검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후 사실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RAI는 방송이 유명 정치인들의

6. IFCN 2019년 기준 현황
http://s3.ap-northeast-2.amazonaws.com/elasticbeanstalk-ap-northeast-2-044030252423/public/uploads/attachment/object/1315/State-Fact-Checkers_v4.2.pdf

2016년 미국 대선 토론 당시 언론사들이 진행한 실시간 팩트체크에 대해 설명하는 정재철 내일신문 기자.
<사진 출처: 방송기자연합회 제공>



선전 도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실시간 팩트체크도 예비 팩트체커들의 이목을 끌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와 클린턴의 토론회 발언을 실시간 검증했다. 뉴욕타임스는 온라인으로 토론회 영상을 보여주고, 채팅창에 후보 발언 중 허위정보를 실시간 팩트체크한 내용을 띄웠다. 이는 기자와 전문가들이 대선 수년 전부터 후보자의 정책과 평소 거짓 주장 경향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국내에선 대선 직전 TF를 꾸려 후보를 검증하고 곧 해체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언론 사례는 국내 언론이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언론사 외에 세계 포털과 SNS도 팩트체크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6월, 남아공에서 열린 제6회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에 다녀온 방송기자연합회 안형준 회장은 페이스북과 구글의 활약을 소개했다. 페이스북은 33개국 52개 미디어와 협약을 맺고 팩트체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구글도 영국 팩트체크 기관 풀팩트(Full Fact)와 협력해 팩트체크 자동화 프로그램에 심혈을 기울이고, 팩트체크 미디어와 공모전을 지원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국내 언론사와 함께, 포털과 SNS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널리즘의 길, 팩트체크 원칙의 '일상화'

보도자료 받아쓰기, 사실을 알 수 없는 논란 기사, 양측 주장만 나열한 인용 기사... 어느 시인은 '쉽게 쓰여진 시'가 부끄럽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쓰여

안형준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이 지난 6월 18~21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6회 글로벌팩트체킹서밋
참가 후기를 들려주고 있다.
<사진 출처: 방송기자연합회
제공>



진 기사들이 그리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 부끄럽다. 팩트체크는 어떤 기사 포맷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언론의 정도(正道)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이야기다.

언론은 사관(史官)이라 했고, 역사의 기록자라고 했다. 그러나, 언론은 도리어 굴곡진 역사의 부여자를 대변하기도 했고, 스스로 부여자가 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현장과 언론 윤리의 실종을 목격한 뒤 오랜 시간 괴로움 속에 언론의 의미와 본분에 대해 고민했다. 그러던 중, 나는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토록 경계하던 소위 기레기와 적폐의 대상에 오르내렸고, 조직과 사회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 스스로의 안일함과 경솔함, 부족함 탓이었다. 비난 받아 마땅했다. 동료기자들이 나를 탄산지식으로 삼길 바라는 것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언론의 정도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망각한 것에 대한 뼈아픈 대가였다.

‘언론의 사회책임주의 이론’⁷⁾에 따르면 언론은 정부로부터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사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고, 직업적 윤리 강령을 지키며,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사회가 지향할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대안으로 팩트체크가 유일한 길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도, 분명히 의미 있는 수단은 될 수 있다. 어떤 팩트체크 기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보도 전반에서 ‘팩트체크 원칙의 일상화’를 통해서 말이다.

40여 년 전 언론의 불신과 유언비어를 걱정하던 유신시대 젊은 기자들의 외침이 이제는 역사 속 한 페이지로만 머물러 있길 바란다. 40여년 뒤 후대에는 부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을 물려주는 것이 지금 언론인들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책임이다. 이 말은 스스로에게 고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ML

7. 프레드 시버트 등. 《언론의 4이론》. 나남 출판사. 1991, 101~142p